



낙농산업의 지속적 유지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강 의 응
서울우유조합 감사

정부가 2001년에 1000억원, 금년에 1500억원 이상을 재정 투입한다는데 낙농가, 단체, 조합 어느 누구도 만족해 하지 못하고, 낙농현안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 낙농정책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WTO 체제 출범 이후 정부는 많은 자금 지원과 시책을 나름대로 펴 왔으나, 낙농에 관해서는 증산정책 이외에는 이렇다할 알맹이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경

부가 2001년에 1,000억원, 금년에 1,500억원 이상을 재정 투입한다는데 낙농가, 단체, 조합 어느 누구도 만족해 하지 못하고, 낙농현안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 낙농정책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WTO 체제 출범 이후 정부는 많은 자금 지원과 시책을 나름대로 펴 왔으나, 낙농에 관해서는 증산정책 이외에는 이렇다할 알맹이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더욱이 1997년 낙농진흥법 개정으로 낙농진흥회를 출범시켰으나, 원유 수요자에게 외면당하면서 낙농가 가입에만 열을 올려 수급의 조절이 아니라 수요처없는 공급만 늘려 오늘에 파경을 자초하였다.

또한 우리 낙농의 현실을 모르는 일부 학자나 정책 입안자들이 규모화가 곧 경쟁력인 양 규모 확대에 치중하고 증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온 것도 오늘 사태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1998년 원유가격 인상 이후 계속적으로 증산정책을 쓰면서 한편으로 가격 인하를 수차 시도하다 농가의 저항으로 성공하지 못하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오늘에 와서 허둥지둥 내놓은 것이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이다.

결국 모든 책임을 낙농가에게 떠 맡기는 꼴이 되니 낙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분노하고 격양된 목소리로 낙농진흥회를 성토했기에 이르른 것이다.

수출이 불가능하고 가공용은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수입을 제한할 수도 없는 낙농환경임에도 2~3년 전부터 상당한 잉여원유가 발생하여 구조적 과잉 상태가 지속하여 왔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낙농진흥회나 정책당국의 책임이 매우 큰데도, 어느 누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낙농인들에게 떠 넘기니 분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현재의 대안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원유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낙농진흥회 책임자의 사퇴와 이후 합리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낙농정책의 제시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은 낙농진흥회가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낙농가의 불신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인 것이다.

진흥회나 정책당국은 우격다짐으로 정책을 정하고 시행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겸허한 자세로 낙농가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는 잉여원유 차등 가격제에 대해 낙농가 입장에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기준생산량을 지난 2001. 7. 1~2002. 6. 30까지 1년간 농가별 원유생산량에서 20%를 삭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오늘의 원유 증산은 쿼터제에 대비해서 약삭빠르게 규모를 키운 일부 낙농가와 낙농진흥회가 생산 보장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수요처 없는 원유 구입에 근본 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농가의 경영 형편에 따라 안정적으로 원유를 생산한 정통 낙농가나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일방적 피해를 주고, 상대적으로 원유잉여의 원인제공자를 보호(?)하여 고정화하는 방책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지역 낙농가는 대부분 토지이용 및 환경규제 등으로 규모화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목장경영 연수가 오래되어 '90년대 후반부터 나름대로 400~800kg의 적정 규모를 유지, 내실을 기하고 있는 농가가 과반수가 넘는데 무차별 적용하여 감산 조치를 하는 것은 낙농진흥이 아니라 낙농말살인 것이다.

서울우유 조합원들이 왜 낙농진흥회 탈퇴를 주장했는지 곰곰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차등가격 적용 원유량(잉여원유의 11%)을 그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 재정자원을 시유중심의 협동조합이나 가공업체(진흥회 가입)를 지원하거나 소비 확대, 홍보 등에 투입하여 시유시장을 키워 가야 할 것이다.

시유시장의 확대 없는 원유 증가는 무의미하므로, 학교 급식의 중단기간동안의 원유에 대한 전액 보전을 통하여 협동조합 등의 시유생산 활동과 국산 원유에 의한 치즈 생산 증대 등에 정부 지원이 집중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행 시기를 2003년에 할 수 있도록 연기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번개볼에 콩 볶듯 해서 안된다. 한 나라의 낙농 시책이 1개월도 안되는 기간 동안 칼로 무를 자르듯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낙농가에게 합리적으로 감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주어야 한다.

IMF이후 많은 군소 낙농조합





과 유업체가 도산하거나 생산을 중단하여 없는데도 수요개발 노력없이 공급 과잉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부추긴 낙농진흥회 사람들의 잘못된 사정은 이해하나, 그럴수록 원칙과 정당성에 바탕을 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는 낙농가에게는 원유가격 인하를, 가공조합이나 업체에게는 우유시장의 난매를 부추기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유중심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시유시장을 위축시켜 원유생산을 더욱 줄여야 하는 악순환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쿼터제를 도입하여 낙농이탈을 원하는 영세 농가의 전업을 돕고, 가족 노동으로 감당할 수 있는 500~1,000kg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낙농을 영위하면서 시유시장을 키워가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실시가 불가피하다하더라도 영세낙농가(400L 이하)나 시유 가공조합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현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적어도 1년 이내에 쿼터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몇가지 제도 내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는 낙농가에게는 원유가격 인하를, 가공조합이나 업체에게는 우유시장의 난매를 부추기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유중심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시유시장을 위축시켜 원유생산을 더욱 줄여야 하는 악순환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쿼터제를 도입하여 낙농이탈을 원하는 영세 농가의 전업을 돕고, 가족 노동으로 감당할 수 있는 500~1,000kg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낙농을 영위하면서 시유시장을 키워가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낙농진흥법 개정이다.

합의 도출, 참여의 임의성, 의결기관 구성원의 불합리 등 그동안 노출된 현 진흥법의 많은 미비점과 문제들이 법 개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유시장의 확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물론 시유시장 확대의 주역이 된 우유조합의 육성, 지원에 정부의 정책 및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지방 우유협동조합의 가공 중단 사태는 해당조합의 책임도 있으나 정책 및 재정지원의 미흡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쿼터제 도입시 도시 근교 낙농의 배제나 규모화에 치중한 배정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근교 낙농의 경쟁력을 인정하고 가격 지지에 의한 적정 규모의 낙농이 영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탁상 이론과 현실 차이를 적시해야 한다.

넷째, WTO체제하에서의 직불제, 수입량 조절 국산 원유사용비율의 상향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들이 함께 마련되어 국내 낙농산업의 지속적 유지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㉞)

(필자연락처 : 031-7676-6670)

♠ 수리몸엔 신토끼! 수슈도 신토끼! ♠